

광주·전남 주택대출 '이자 폭탄' 현실화 되나

2009년까지 갚아야 할 단기대출 58%

주택대출 비중 증가를 전국평균 5배

73%가 만기일시상환 목돈 부담 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3일 발표한 지역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동향은 최근 1년 사이 주택담보대출 급리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76.8%가 3년이하(37.2%)나 3년~10년(39.6%)인데 반해 전국적으로는 49%만이 10년이하의 단기 대출이었다. 더구나 1년 7개월후인 2009년까지 대출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 지역 대출자 비중은 58.9%로 전국(41.7%)보다 높아 단기 상환 압박이 심했다.

상환방식에 있어서도 지역 대출자의 73.2%가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지만 전국에선 47%만이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고 나머지는 나눠 갚기로 해 지역 대출자들의 부담이 더 컸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대출 금리가 본격적인 상승세에 접어들어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계대출은 주택가격 상승률 및 신규 아파트 공급에 영향을 받았는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6%에 달했고 아파트 공급이 급증한 2002년 한해에만 1조7천785억원이 늘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 신용카드 사태와 주택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자 가계대출도 줄어 2004년에는 1천681억원 느는데 그쳤다.

하지만 2005년부터 다시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광주 수완지구와 진월지구 및 남악신도시 등에 3만2천998호의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4144억원으로 4년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주택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했다는 의미로, 가계대출 증가분에서 주택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68.4%에서 지난해 83.7%로 1년 사이 15.3%포인트나 급증했다.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볼때도 광주·전남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주택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04년~2006년까지 3년동안 가계대출대비 주택대출 비중은 광주·전남지역이 36.3%에서 43.2%로 6.9%포인트 증가해 같은 기간 전국평균 증가율(1.2%포인트)을 크게 앞질렀다.

◇대출자 가계부담은 얼마나=주택대출 증가가 우

려되는 이유는 대출 증가세보다 대출 조건 등 내면적인 문제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95%가 금리인상이 곧바로 반영되는 변동금리 상품인데다 전국 평균에 비해 대출 만기가 짧고 일시상환 비율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지역 대출자들의 주택대출 만기는 76.8%가 3년이하(37.2%)나 3년~10년(39.6%)인데 반해 전국적으로는 49%만이 10년이하의 단기 대출이었다. 더구나 1년 7개월후인 2009년까지 대출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 지역 대출자 비중은 58.9%로 전국(41.7%)보다 높아 단기 상환 압박이 심했다.

상환방식에 있어서도 지역 대출자의 73.2%가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지만 전국에선 47%만이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고 나머지는 나눠 갚기로 해 지역 대출자들의 부담이 더 컸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대출 금리가 본격적인 상승세에 접어들어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상환방식별 주택대출 비중(%)

	광주·전남			전국		
	2004	2005	2006	2004	2005	2006
만기일시상환	82.6	82.4	73.2	76.8	63.7	47.6
분할상환	17.4	17.6	26.8	23.2	36.3	52.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택대출의 만기도래 현황(%)

	광주·전남	전국
	2007년(향후 1년 이내)	23.7
2008~2009년(1년초과~3년이하)	35.2	17.8
2010~2016년(3년초과~10년이하)	20.0	18.9
2017년 이후(10년 초과)	21.0	39.4
합계	100.0	100.0

은행에 따라서는 2005년 8월부터 현재까지 최고 1.83%포인트나 오른 곳도 있어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렸다면 늘어난 이자부담이 183만원이나 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투표권 공약 이젠 그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3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대선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기본요건과 유권자용 비교 분석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국정홍보처 폐지 추진

기자실 통폐합 법적 대응...이석연 변호사 등 헌법소원

정리권은 23일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와 관련,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했다'며 6월 국회에서 각종 입법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대한 입법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정홍보처 폐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기자실 통폐합 조치의 위험 여부를 검토해 추가 대응해 나가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김훈·이석연 변호사)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21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나라당 강제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에서 "분서경유 현대판이 진행중이다. 한마디로 '본인경찰'이다. 언론은 불태우고 알 권리를 땅에 묻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6월 국회가 열리면 이를 법적으로 막

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정홍보처 폐지법안도 심의를 기울여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취재통제는 언론의 자유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기자실 폐쇄로 실정을 덮을 수는 없다"며 "중대한 언론침해 문제를 수수방관하지 않겠다. 5월 중 빠른 시일내 국회 문공위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법적·정치적 수단을 포함한 무한 투쟁을 선포한다"며 "노무현 정부가 언론독재자의 길을 고집한다면 입법 수단을 동원해 서라도 브리핑룸의 통폐합을 막겠다"고 말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은 정부 부처 내에서 기자들의 취재제함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형일 대변인은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국민의 알권리를 축소하고 지나치게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취재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언론관련 법률을 검토하겠다"며 "필요하면 정보법(입법)연대도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종필 "기자실 통폐합은 언론에 대한 보복폭행"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대선후보 시절 언론 특보를 지냈던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23일 "기자실 개편안은 언론에 대한 노 대통령의 과도한 피해의식의 발로이자 언론에 대한 보복폭행"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2002년 당시 노 후보의 언론관 등을 소개하며 "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비뚤어진 언론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2002년 5월 '언론은 수만

평 사과발에서 씩은 사과 하나 주어서 이 사과 밭은 다 썩었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연설했고, 이에 대해 나는 '썩은 사과를 찾는 것은 언론의 본래 기능'이라고 반박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사과밭에 들어가 이상징후를 발견해 사전경고를 발령하는 것이 언론 본연의 기능"이라며 "하지만 결국 노 대통령은 언론의 사과발 출입을 금지했고, 이로 인해 노 대통령 스스로 더 큰 피해자로 전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 알권리·공익 부합엔 모든 정보 공개

정부 '공익검증제' 8월 도입

정부는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즉각 공개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확정,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모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공익검증제도'를 8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보공개법을 개정,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될 때는 기관장 재량으로 모든 비공개 정보

를 공개한다"는 조항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의 모든 정보는 작성단계에서 공개와 비공개로 나뉘며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기존 비공개 정보 일체를 '공개 가능 대상'에 올려놨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나 '기관장 재량'이라는 임의적 기준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토록 해 실효성 있는 공개 조치가 뒤따를 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은 또 작성단계에서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요구가 없더라도 작성 즉시 정부의 인터넷 공간인 '전자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사전공개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체장·지방의원 '주민 소환제' 내일부터 시행

시민단체 소환 기준 마련 나서

주민들이 비리를 저지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투표로 사퇴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은 소환 대상 기준을 마련키로 하는 등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동시에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출구처에 요구해 국회가 국민소환제 입법화를 추진하는 데 기록적 역할을 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우선 소환 대상자 선정보다는 소

환대상 기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유권자가 선출한 주민들의 대변자인 만큼 주민소환 대상으로 선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우선 검토하고 있는 소환 대상 기준은 일차적으로 지역민의 이익에 반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행정을 추진하는 경우다. 벌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지역민 다수가 반대하는 행정행위를 고집하는 경우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비리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치인은 당연

히 소환대상이다.

시민단체들이 소환 대상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소환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이다. 만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를 소환하고자 한다면 각각 약 10만명과 14만명의 주민(투표권자) 서명이 필요해 쉽지 않다.

하지만 주민소환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소환 대상자들이 거론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경기 하남시의 20여개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역화장장 설치와 관련, 김홍식 하남시장의 독단적인 시정을 문제삼아 6월 초 소환투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서명을 받을 계획이며, 광명시에서는 호남향우회를 중심으로 호남 비하 발언을 한 이효선 광명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BORYUNG
보령제약

50
BORYUNG
A healthy society is the only dream of Boryung.
보령 창업 50주년

목이 칼칼할 땐, 용각산 쿨!

황사

매연 먼지

황사, 매연, 미세먼지로 인해 목이 답답하고 칼칼할 땐 용각산 쿨입니다.
물 없이 먹는 과일, 용각산 쿨은 칼칼한 목에 직접 작용합니다.

칼칼한 목을 시원하게~용각산 쿨!

▶ 기관내부에서의 점액 분비 증가와 섬모운동 촉진으로 가래를 제거해줍니다.

▶ 신뜻하고 시원한 복숭아향과 민트향, 두가지 향이 있습니다.

▶ 물 없이 먹는 과일이라 휴대가 간편하고 먹기 편합니다.

※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하고 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심의필: 908-0500

용각산 쿨 TV-CF